테마칼럼 | 이성세계 | 정치프리즘 | 정세인 눈 | 문화 향기

‘훈수정치’ DJ가 하면 불륜, YS가 하면 로맨스?

김 행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내신 만큼, 이번 대선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한나라당도 좀 도와주십시오.”(이명박 후보)

“한나라당이 너무 세서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나요.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

“이번 대선은 지역감정이 없어지는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이 후보)

“이미 호남은 영남 사람인 노무현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까.”(김 전 대통령)

지난 29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나눈 대화다.

> “전직대통령의 ‘훈수’가 ‘월권’인지 ‘의무이자 권리’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다. 양김이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그들의 몸값’이다”

이후보는 DJ와의 40분 면담에서 두 번이나 ‘대선중립’을 요구했다. 정권교체를 내건 이 후보와, 이에 맞서 범여권 대통합과 전열 정비를 주문하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만약 같은 말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영삼(YS) 전대통령에게 했다면 어떠했을까?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신 만큼, 이번 경선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한나라당이 정권교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이다.

YS는 노골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 3월에는 이후보의 출반기념회도 참석하는 등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 덕에 이후보는 당내 민주계와 경남·부산 등에서 지지세를 넓히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이후보 생각엔 DJ가 하면 불륜이고, YS가 하면 로맨슨가? 우습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나서 “전직대통령의 훈수는 의무”라며 DJ를 지원사격한 것도 꼴사납다. 청와대는 29일 정구철 국내언론비서관 명의로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글을 통해 “(DJ는) 전직 대통령이면서 국가 원로이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의견을 내거나 조언을 하는 것은 의무이면서 권리”라고 두둔했다.

서강대 손호철 정외과 교수는 최근 ‘강시들의 부활의 계절이 도래했다’는 글을 통해,“‘부활’하면 성스런 부활을 생각하나 죽여도 죽여도 다시 살아나 두 팔을 뻗고 콩콩 뛰면서 쫓아오는 강시의 부활도 있다”며 “불행히도 대선과 함께 떠오르는 부활은 강시의 부활”이라고 질타했다.

그 중 대표적 부활이 바로 DJ 와 YS가 아닐까? 두 사람은 대선을 앞두고 ‘석양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YS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DJ는 범여권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치적 성과물도 걷었다. YS가 지원한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됐고, DJ가 사생결단하고 밀어붙인 범여권 대통합도 그런대로 모양을 갖췄다. ‘대통합민주신당‘이다.

비록 민주당이 빠지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 DJ와 민주당 박상천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직대통령의 ‘훈수’가 ‘월권’인지 ‘의무이자 권리’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다. 양김이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그들의 몸값’이다.

그리고 기꺼이 그 몸값을 치루려는 현실정치인들이 있어 가능하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3김의 한 축인 김종필 전국무총리는 ‘월권’도 ‘의무와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대선개입은 그만” 하고 외치고 싶다. 진짜 존경받는 국가원로로 남아주시길. 그게 여론이다.

〈전 중앙일보 기자·정치 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책 실효성 있어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30일 주택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건설업계의 현안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최대한 빨리 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침체의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지난 6월 말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같은 일시적인 처방만으로는 벼랑 끝에 몰린 지방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킬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이미 7만 가구를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만 1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의 부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이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직시했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지방시장에 대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넘쳐나는 수도권과 똑같은 잣대로 금융을 규제해선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와 주택사업시 기반시설부담 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 민심 달래기 차원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규제완화로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녹차 잔류농약 ‘이상 없다’ 믿어도 되나

녹차 잔류농약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 전남을 비롯 경남, 제주 등 녹차 재배주산지에서 생산된 녹차원료와 제품을 수거해 150개 농약성분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산 녹차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니 다행이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 결과는 국산 녹차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녹차는 웰빙 바람을 타고 급속히 대중화됐다. 단순한 기호음료라기보다는 건강음료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냉면과 아이스크림 등 녹차를 원료로 한 상품들도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농약 녹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녹차티백 제품에서 사용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파라티온 성분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국이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처분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산 녹차의 주산지는 전남이다. 특히 보성 녹차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연간 5천억원을 넘고 있다. 생엽(生葉) 판매와 가루녹차, 냉면 등 가공식품, 녹차밭을 매개로 한 관광수입 등이다. ‘농약 파동’이 계속되면 전남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남의 녹차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녹차 재배면적이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중국산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 더구나 잔류농약까지 검출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며 녹차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재배농가들이 농약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친환경·고품질 녹차 재배를 확대하고 농약 안전사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정 찬 영

애주가와 알코올 의존자의 차이는?

얼마 전 건전한 애주가로 표창을 받은 한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면허취소가 된 사건이 회자됐다. 애주가와 알코올 의존자는 동전의 양면일까?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음주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있다. 술로 인해 일상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데도 음주를 단호히 사양할 선택능력이 없다면 의존(중독)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생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 없이 애주가로 사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대다수의 알코올 의존자도 자신은 그저 평범한 애주가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섬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다 술 먹는 낙에 빠져 발병한 사람 ▲영관급 장교로 군 제대하고 건설회사 이사까지 지냈지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혼 당하면서 의존성이 심해진 사람 ▲요리사로 직업상 술과 친하다 보니 젊은 나이에 의존자가 된 사람. 인생은 구실일득(九失一得), 구패일승(九敗一勝)이라 했던가. 뜻하지 않은 수많은 인생 스트레스를 겪으면 애주가의 음주는 늘기 마련이다.

알코올 의존의 발생에는 학식이나 인격,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의 뇌를 적신 알코올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활보할 때도 지쳐 자고 있을 때도 알코올은 우리의 뇌세포와 신체에 반드시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뇌세포막의 배열을 바꾸고 신경전달물질에 변화를 주며 신경회로의 활성도를 바꾼다. 일생동안 취하고 깨어나고를 반복하면 뇌와 몸은 고스란히 누적된 손상을 입게 된다. 그 손상은 언제 인생 표면 위로 드러날 것인가? 임상에서는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

술을 빈번히 마시는 이에게는 언젠가부터 미세한 갈망감이나 금단 현상 혹은 이른바 마른 주정이 나타난다. 그것은 왠지 기분이 꿀꿀하고 갈증이나 짜증이 나며, 왠지 한잔을 해야 기분이 날 거 같은 느낌과 같은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이렇게 뇌신경세포가 술을 갈망하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한잔 하게 된다. 세상 스트레스에 때문에 마시는 것인지 뇌신경세포의 금단이나 갈망에 마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뒤섞인 작용인지 자신은 모른 채. 그러는 사이 뇌신경세포의 변성(갈망과 금단)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 술을 몰랐다면 유지했을 기억력과 판단력, 근력, 성기능, 마음의 여유로움, 가정의 화목, 직업적 안정, 건전한 대인관계를 자신도 모르게 음주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을 것을 걱정하고 마시는 이는 거의 없다.

적당히 마신 술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의학적으로 심장에 도움이 되는 양은 에탄올 13.6g 즉 소주 2잔 분량이다. 현실적으로는 적정량을 소주 4잔 정도로 제시한다. 이 이상의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은 과음이다. 과음과 흡연과 스트레스로 갱년기를 일찍부터 맞이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이 나이에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스트레스 푸는 거 말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또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 우리 병원의 슬로건을 들려주고 싶다. ‘세상은 술보다 즐거운 일로 가득하다.’

〈새 미래병원 원장〉

기 고

전 갑 길

왜 혁신인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조직이나 개인이 변화하는 것이 곧 혁신이다.

혁신은 창조다. 창조는 변화에서 온다. 변화는 구각을 탈피하는데서 찾아진다. 구각 탈피는 과감하게 관행과 관습을 버리는 것이다. 혁신은 살가죽을 도려내는 고통을 인내해야 하며, 미래의 희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혁신은 결코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바꿔야 한다. 우공이산(牛公移山)이란 말같이 꾸준하고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

공직사회 역시 사회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만, 즉 ‘혁신’을 이뤄내야 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그동안 사회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 신분보장제도는 부당한 간섭 없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케 하려는 것이 원래의 취지다. 예나 지금이나 신분이 안정되면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계발에 소홀해 무능해지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를 채찍질해야 한다.

공직사회에도 철밥통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공직사회 여기저기서 부적응자에 대한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공무원 신분보장제도가 더 이상 ‘베짱이’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광산구는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혁신’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주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희망광산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1년여가 지난 현재 아무리 험하고 먼 길을 가더라도 걱정이 없을 만큼 ‘혁신’의 기틀을 다졌다고 자평한다.

광산구는 먼저 행정의 비능률과 경직성을 해소하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제와 본부장제를 도입,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또 분임조별 토론으로 진행되는 혁신 워크숍, 매월 열리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마일리지제 도입 등도 병행했다.

이같은 혁신운동에 힘입어 공직자들이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누비며 각 분야에 걸쳐 각종 혁신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외부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지방자치 대상,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 평생교육도시 선정, 정보화 우수기관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16차례나 각종 상을 수상했다.

올 들어서도 살고싶은도시 시범도시 선정, 2007 대한민국 스포츠·레저문화대상, GS경영대상 품질경영부문 최우수상, 광주·전남 지역혁신 최우수구, 국가생산성대상 우수자치단체, 전국 지역혁신 우수구 선정 등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광산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하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현장밀착형 혁신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한 혁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광산구 800여 공직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반도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구민들과 함께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광주시 광산구청장〉

無 等 鼓

완도해경의 착각

한 때, 광주경찰서(현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직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광주천에 변사체가 떠오르면 천변 경찰들이 간짓대로 상대편 관할(管轄)로 밀었다는 것이다. 통통 불은 시신에서 지문을 뜨고, 부검하고…‘먹잘 것 없는’ 일에 시간만 빼앗기기 때문이었을 게다. 관할을 둘러싼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은 오늘에도 계속된다.

완도·장흥·강진·해남지역 양식장에 전복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완도해경은 경비정 20여 척을 동원하고, 전문 수사팀을 꾸렸어도 ‘꾼’들에게는 속수무책이라는 소식이다. 해경에 접수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어민들은 “신고하는데도 지쳤다”고 푸념한다.

사태가 심각하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수산물 운반차량에 대한 선별 집중 검문검색과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대한 테마 순찰활동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남청은 또 “이번 조치는 김남성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전복 양식어민들이 ‘해양경찰에서 절도 예방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복 도난으로 피해가 크니 사건을 전남경찰에서 수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완도해경의 심기가 내심 불편한 모양이다. 해경의 관할인데 ‘육상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는 바람에 우세를 사고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것이다.

해경의 대응 방식도 촌스럽다. 전남청장에게 수사를 요청한 어민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등의 진술서를 받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전남청의 보도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인데…과연 그럴까?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관할이 어디인지, 어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맘 놓고 전복 양식만 하면 그만이다. 볼멘소리를 하기 전, 철저한 공조수사로 범인들을 검거하는 게 우선이란 걸 완도해경은 왜 모르는 것일까….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의료 처치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이중 부담 아닌가

시내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인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호스로 환자의 구강을 통해 가래를 빼는 일을 간병인이 하고 있다. 이일을 정기적으로 처치해 주지 않으면 폐렴이 될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간호사의 관리만으로는 꼼꼼히 할 수 없어 중환자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입원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의료 처치비는 그대로 내면서 환자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간병인 비용까지 2중으로 내는 셈이다.

간호사나 의료인이 해야 할 일을 환자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돈 들여 고용한 간병인들이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의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싼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호자가 이중 부담하는 것 아닌가.

중환자의 경우 간병인의 역할은 절대적인데, 간병인마저 둘수 없는 환자 가족들의 고충은 얼마나 클까.

병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따로 들어가는 구조, 바꿔져야 하는 것 같다.

▲송희건·광주시 북구 태령동

아이 안전 위해서라지만 카 시트 가격 만만찮아

네 살과 두살짜리 아이를 둔 주부다. 6세 이하 유아를 차에 태우고 다닐 때 유아용 카 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돼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솔직히 카 시트 가격이 서민층 입장에선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대중교통에는 유아에 대한 안전시설이 전무하다. 혼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려면 마을버스, 택시, 버스 등을 타야 하는데 유아를 위한 시설을 갖춘 대중교통은 없다. 결국 ‘아이를 가진 돈 없는 엄마들은 아예 외출하지 말라’는 말 아닌가.

법을 만들기 전에 카 시트의 가격 조정을 비롯, 대중교통의 안전성에 대해 먼저 고려했어야 했다. 서민들이 20만~30만원짜리 카 시트 두 개를 사느니 차라리 과태료를 무는 게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말이 많다. 이런 제도부터 바꾸거나 조정해 나가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